



박근혜의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제1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은 이를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 성장이 둔화하는 중국 경제, 신흥공업국 위기 등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부터 본보기로 공격해 노동계급 전체로 고통전가를 확대하려는 계획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위선적이게도 노동자들에게는 "뼈를 깎는 각오"를 하라면서, 정작 '정상화' 실행계획에서 '낙하산' 기관장 방지책은 뺐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이미 공공기관에 포진한 친박 인사가 1백14명이나 된다.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정부가 확정한 '정상화' 실행 계획을 보면 그 진정한 목적을 알 수 있다. 첫째, '정상화'는 민영화 확대 정책이다.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 체제 도입"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만 봐도 박근혜가 철도 분할 민영화 모델을 확대할 작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채 감축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 포함됐는데, 이것도 민영화

로 연결될 수 있다. 민간 자본 확대는 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우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매각 등 '자산 매각' 방식도 민영화로 직결될 것이다.

공공기관 부지나 사업들이 한꺼번에 매각 대상이 되면, 재벌들만 알짜 공공재산을 헐값에 가져가는 특혜를 누릴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이다.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의 압박 속에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은 임대주택, 풍력발전, 도로 등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계획을 내놨다.

셋째,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단 요금 인상 계획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앞으로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다. 부채를 줄이라는 정부의 엄청난 압박 자체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의 유혹을 낳을 것이다.

넷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공

격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려고 단합을 개악하려 하고, 이에 따르는 저항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 시 노동조합의 동의권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단 일부가 '이번 경영평가 목적이 노조 때리기냐고 항의하며 줄줄이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 책임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엄청난 특혜를 누려서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는 모두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빗더미 인천공항철도 인수, 보급자리 주택

건설, 해외 자원 개발, 부실 저축은행 정리 등이 바로 부채 급증의 핵심 이유다.

반면, 이번에 "과도"하다고 지적된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를 다 모아 봤자 1천 6백억 원가량으로, 중점관리기관의 총 부채 4백11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약 0.036퍼센트밖에 안 된다.

사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속 삭감됐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의 본보기로 여기는 철도공사의 경우, 이미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가 많이 삭감돼 이번 '정상화' 계획에서는 겨우 1인당 2만 원밖에 깎을 게 없는 지경이었다.

정부는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줄이라'고 말하지만,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무원 평균보다 낮게 받고 있다(공공운수노조·연맹 자료).

» 뒷면으로 이어짐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안’은 임금 삭감 선전포고

박근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기존 연공급제를 약화시키고 직무급·직능급·성과급제를 도입·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40대 중후반부터 호봉승급분을 줄이고 직무급으로 전환하고 고령자에게 임금피크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저임금체계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게다가 정부는 상여금을 성과 기준으로만 지급하라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의 일부’라는 대법원 판결을 반복하려는 의도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대안적 임금체제로 제시한 직무·성과급은 직무·숙련도·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직무 배치(인사이드)나 인사평가, 업무 지시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통제를 강화시킨다. 또한 직무 배치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올랐다 내렸다 하므로 임금 안정성이 악화돼 노동자

들은 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리기도 힘들어진다.

이미 선도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를 실시한 KT 사례 등에서 보듯, 이는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해롭다.

연공급제

정부는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생산직 신입사원 대비 30년 경력자의 임금이 3.3배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 상승폭이 선진국보다 큰 것은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신입의 초기 임금이 낮아서다. 지금의 중장년 노

동자들은 연공급제에 따른 미래의 보상을 믿고 청년 때의 저임금을 감수해 왔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녀 결혼비용, 학자금, 노후 보장 등 때문에 목돈이 든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 복지는 매우 적다. 그래서 연공급제는 노동자들의 현실적 필요에 부합한다.

연공급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결국 임금을 삭감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고용안정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총 등은 줄기차게 직무급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작업장에서는 명목상 직무급 등은 도입하되, 그 내용은 호봉제처럼 운영하는 식으로 타협해 개악을 막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임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노동운동 전체 차원의 단결 투쟁으로 노동조건 후퇴 시도에 맞서야 한다.



철도 기관사·차량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서려 한다

정부가 철도노조를 공공부문 ‘정상화’ 공격의 본보기로 삼으며, 노동자 1천여명에 대한 강제 전보를 밀어붙이려 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매년 2회 정기 강제 전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제 전보는 사측이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노조를 약화시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쓰는 악랄한 수법이다. 이미 KT와 발전노조가 그 심각성을 잘 보여 줬다.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철도 노동자들은 “타 지역과 새로운 작업으로 발령내는 건 아예 그만두라는 말이다” 하고 분개했다. 20년차 기관사는 “내가 운전하던 구간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단련됐지만, 다른 노선은 1년차 부기관사만큼도 잘 해낼 자신이 없다. 결국 이걸 열차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며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의 강제 전보에 맞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파업을 결의했고, 기관사와 차량 직종 노동자들도 전국 지부장 회의를 열어 독자적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것은 매우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이다. 철도노조 중앙 지도부가 이 투쟁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강제 전보

그러나 지금 중앙 지도부도 인정하듯, 정부의 진두지휘 하에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대량 강제전보 시행으로 철도 노동자들의 “분노하는 열기가 하늘을 찌른다.” 이 때문에 강제 전보 시행을 앞두고 철도 현장 곳곳에서 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각 지부가 천막 농성, 집회 등을

시작했다.

이 공격은 수서KTX 민영화 저지 파업에 대한 보복이며, 무엇보다 앞으로 추진할 철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분할 민영화를 위해 노동자 1만 1천명을 분할 자회사로 ‘전직’ 보내고 이를 거부하면 ‘정리해고’할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보면 정부의 공세가 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강제 전보에 맞선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3월 24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개최하는 항의 집회 등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3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철도 투사들은 이 회의에서 이미 파업을 결정한 기관사·차량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더 많은 지부들의 파업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앞면에서 이어짐

설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무원이나 민간 부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복리후생을 누리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비난받을 이유는 못 된다. 정부가 말하는 ‘8대 방만경영’의 사례에는 유급 휴직, 보육·교육비, 의료비처럼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다음 세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이 주로 포함돼 있다.

가령, 육아휴직급여를 보전해 주는 제도는 육아로 인한 여성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권장돼야 할 제도다. 정부는 초·중·고 자녀 학비 전액 지원이나 일부 기관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도 문제 삼지만, 이것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오히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요구해 왔다.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서로 더 낮은 기준으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잘 방어해야,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박근혜가 민간부문 단협까지 공격하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 공격의 칼 끝은 단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벌어진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들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우선 공격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는 지렛대가 돼 왔다.

‘정상화’ 대책이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후퇴를 포함한 정책이므로, 이것을 막는 것이 노동계급 전체에게 이익이기도 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 자신의 작업장 투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반대를 ‘이기주의적’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정상화’ 대책 관련 교섭과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정상화’ 계획 강행을 막기 위한 공동 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공격하고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난해 철도 파업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력한 행동은 그 자체로 정치적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연대를 확산하는 구실을 형성할 수 있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값: 4,000원

문의: 02-2271-2395

workerssolidarity.org 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